

# G-Welfare Weekly Report

## 01

### 중앙정부 정책동향

#### 1.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관한 규정, 개정안 발의

##### 01 주요 내용

-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협의·조정에 관한 규정 삭제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8.4.)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일방적인 조정을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
  - 이에 협의·조정 조항을 삭제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율·탄력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 동의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
  - '2013~2016.6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아래 표)'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부에 신설 혹은 변경을 협의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동의 비율은 2013년 80.6%에서 2015년 58.0%로 매년 감소한 반면,
  - 중앙의 사업에 대한 동의 비율은 2014년이 78.6%로 가장 낮고, 2015년에는 13건 전체(100%)를 동의

구 분	합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 (5월)	
	중앙	지자체	중앙	지자체	중앙	지자체	중앙	지자체	중앙	지자체
협의요청 건수	72	893	30	31	14	67	13	348	15	447
동의	56	444	28	25	11	42	13	202	4	175
부동의	3	76	2	-	1	21	-	41	-	14
대안권고반려 등	2	143	-	6	2	4	-	100	-	33
협의 중	11	230	-	-	-	-	-	5	11	225

- 협의 시 정량화된 평가방식을 활용하지 않는 등 심사 기준의 객관성이 없다는 점도 비판

##### 02 경기도 시사점

- '15년 기준, 경기도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대상인 52건 중 21.2%인 11건이 부동의

구 분	합계		'14년도		'15년도		'16년 (7월)	
	도	사군	도	사군	도	사군	도	사군
계	13	84	1	6	6	46	6	32
97건	13	84	1	6	6	46	6	32
동의	8	40	1	2	5	30	2	8
변경보완(동의)	1	6	-	-	-	6	1	-
부동의	1	15	-	4	1	10	-	1
협의중	3	23	-	-	-	-	3	23

- 사회보장제도 사업 신설변경 협의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
  - 주거, 고용 등까지 협의대상이지만 해당 실국의 경우 절차 및 협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복지정책과로 일원화하여 효율성 도모

\* 자료 : 남인순 의원실/ 보건복지부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 2. 뜨거워지는 한반도, 폭염 대책 마련 중

### 01 주요 내용

-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에 효율적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를 위하여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운영
  - 2016년 폭염대책 기간은 5월 20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 및 지자체 관계부처 및 지자체별 각 T/F팀을 중심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
- 「주간 안전사고 예보」에 폭염 위험을 추가하는 등 폭염 대비책을 개선
  - 무더위쉼터 야간, 주말 운영 여부, 위치 등 정보 서비스 강화(지자체 홈페이지, 안전디딤돌 앱)
  - 온열질환 발생 감시·정보수집 체계를 개선하고, 온열질환 사망자의 발생지역, 기저 질환 등 심층조사 시행
- 중앙·지자체의 중점 추진 대책

국민안전처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 폭염특보 전파 및 행동요령 홍보(폭염 주간안전사고 예보, 크로샷 등)
국민안전처, 지자체	폭염대비 현장밀착형 119 응급구급체계 구축
	• 관할 구급차 부재시 펌블런스*(1,105대) 출동체계 가동(의료장비 탑재)
	• 생리 식염수, 얼음팩, 얼음조끼 등 필수 구급장비 탑재
국민안전처, 지자체	전국 무더위 쉼터(41,569개소) 지정·운영
	• 지자체 예산확보 89억원(쉼터당 약21만원) : 국고 15억, 지방비 70억, 재해구호기금 4억
복지부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복지부, 지자체	• 일일 폭염환자(온열질환) 발생보고(의료기관 ⇄ 복지부 ⇄ 국민안전처)
	• 재난도우미(12만 여명) 활용, 안부확인 및 행동요령 홍보(복지부·지자체)
중앙,지자체	캠페인, 가두방송, 언론·방송 등 폭염대응 행동요령 집중 홍보

\*산업부, 농식품부, 고용부 등의 대책은 제외

- 보건복지부는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무더위쉼터의 운영 시간을 확대할 것을 지자체에 권장('16.8.10.)
  - 폭염피해방지를 위한 '어르신 행동요령' 수립 및 경로당주민센터 등에 포스터 작성 배포
  - 전국 경로당(64,716개소)에 냉방비(월5만원) 지원하고, 독거노인 40,263명에게 약 7.3억원의 냉방용품, 의류 등 후원
  - 건강생활환경 등이 취약한 22만명의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생활관리사가 주 1회 직접 방문, 주 2~3회 전화를 통해 안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
  - 저소득층에게 무더위는 생존과 직결된 만큼, 주거환경 개선 등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

### 02 경기도 시사점

- 경기도는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 시 행동요령 안내 및 안부확인, 서비스연계 등을 실시 중
  - 독거노인 29,874명에 대해 1,170명의 생활관리사를 배치하는 것 외에 방문건강관리요원 등의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수시 체크하고 폭염취약계층 및 피해 사례 DB화 필요
- 고온 등으로 기온의 오르내림이 크고 또 반복될수록 신체는 감당해야 할 스트레스(극한기후 중후군)가 커지는 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
  - 폭염 관련 스트레스 완화 매뉴얼을 개발하여 아동·청소년 등 스트레스에 취약한 집단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전체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02

#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 1.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지난달 21일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예산편성 과정과 내용을 개선하고 정부와 지역주민 간 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점에서 대표적 주민참여제도로 꼽힘
  -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실제 복지욕구 반영, 제3자의 참여로 재정규율 강화, 지방정부 거버넌스 지표 실적 향상 등에 유용한 제도로 평가
  - 우리나라는 시민사회 주도로 2000년대 초반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2011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 현재 강원·충북·충남을 제외한 14곳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위원 수는 81명
  -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총 14곳이며, 위원 수는 서울이 250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이 30명으로 가장 적음(경기도 : 66명)
- 지난해 기초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현황 조사결과\*, 도내 시군 중 23곳에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비중은 평택·구리·과천이 높음
  - 평택의 경우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은 반면 해당예산이 약 420억(4.62%)으로 도내에서 중 가장 높은 반면 양주는 올해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이 미반영

\*임성일 외, 2015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표 1> 시군별 주민참여예산 및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 구성여부	예산 (백만원)	비중 (%)		위원회 구성여부	예산 (백만원)	비중 (%)		위원회 구성여부	예산 (백만원)	비중 (%)
경 기	○	15,133	(0.10)	군 포	○	1,678	(0.40)	고 양	○	1,776	(0.12)
수 원	○	6,609	(0.28)	광 주	×	2,220	(0.36)	남양주	○	3,688	(0.44)
성 남	×	21,586	(0.92)	김 포	○	716	(0.13)	의정부	○	479	(0.08)
부 천	○	3,670	(0.34)	이 천	○	55	(0.01)	파 주	○	5,263	(0.76)
용 인	○	27,097	(1.47)	안 성	○	2,598	(0.57)	구 리	×	11,495	(2.53)
안 산	○	9,737	(0.94)	오 산	○	941	(0.27)	양 주	○	0	(0.00)
안 양	○	691	(0.09)	하 남	○	1,478	(0.32)	포 천	×	211	(0.05)
평 택	×	42,039	(4.62)	의 왕	○	484	(0.19)	동두천	×	315	(0.09)
시 흥	○	4,615	(0.75)	여 주	×	923	(0.18)	가 평	×	1,002	(0.28)
화 성	○	2,607	(0.19)	양 평	○	1,034	(0.23)	연 천	○	455	(0.15)
광 명	○	868	(0.15)	과 천	○	4,041	(2.06)				

\*위원회 구성여부: 14년 8월 기준  
\*예산: 16년 본예산 기준  
비중은 당초 세출예산 중 주민 참여예산의 비율임

- 최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대해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에 대한 우려 존재
  - 위원회 설치 의무화 조치는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첫 단계로서 의미 있게 평가
  - 반면 실제 규모보다 현저히 낮게 위원 수의 제한을 둔 것에 대해 지역별로 다른 인구규모와 예산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비판
- 본 제도가 지방재정의 투명성·효과성·공정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적극적 제도운영과 함께 중앙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함

## 2. 재단 주요행사 안내

사업명	주요내용
2016 제1회 누림콘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8. 18.(목) 15:00</li> <li>• 장 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210호</li> <li>• 내 용 : [1부] 특강 [2부] 마술쇼·공연(여행스케치) 등</li> <li>• 참 여 : 경기도 내 장애인 및 가족 200명</li> </ul>

# 03 FACT CHECK

## 후진국형 질병이라는 결핵, 왜 줄어들지 않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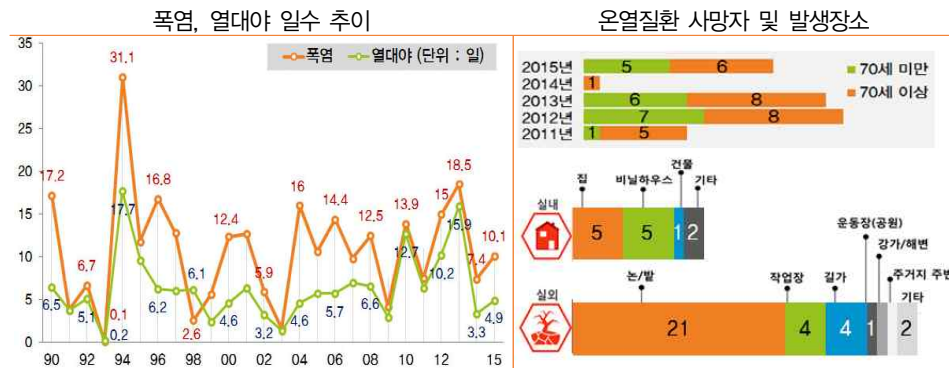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2016.8.4.)한다고 발표

-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8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 결핵은 치사율 50% 이상으로 무서운 질병이었으나, 1940년대 항(抗)결핵제가 등장하고 백신이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는 ‘후진국 감염병’으로 인식
- 흔히 결핵을 끼게·반찬을 공유하는 한국식 식문화와 연관 짓기도 하지만, 결핵은 공기로 전염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정부의 느슨한 관리·높은 인구밀도·경각심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6·25 직후 결핵 창궐기에 보건소 책임으로 결핵을 밀착 감시·치료하다 1989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병원 중심 관리로 전환하면서 감시가 느슨해졌고,
  - 치료 기간이 6~9개월로 길고 부작용도 있어 투약을 임의 중단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대중교통 이용, 학교·군대·기숙사 등 다중 밀접 생활을 하는 경우도 빈번해 쉽게 전파가 가능한 환경
  - 과도한 다이어트와 운동 부족으로 면역력이 감소해 결핵 감염에 취약한 10·20대에서 빈발
  -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받고도 사회적 편견과 냉대를 걱정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직장·학교 생활을 계속하는 안이한 문화 등
- 결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결핵 환자를 찾아내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중심 방역에서 환자 주변의 감염 의심 사례를 찾아내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며,
  - 정부 차원에서 결핵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결핵 예방을 위한 BCG 예방접종의 백신 수급\*을 안정화하는 등 신속하고 일원화된 사업 추진이 필요

\*덴마크 제약회사가 지난해 수출을 중단한 후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04 통계로 보는 복지

## 폭염의 다른 이름, ‘소리 없는 살인자’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7.27일자)(우)

- 무더위가 가장 심했던 해는 1994년으로, 평균 폭염일수 31.1일, 열대야는 17.7일
  - 반면, 폭염일수가 가장 적은 해는 93년으로 0.1일 수준으로 미미하였음
-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47명으로, 이 중 70세 이상이 60%이며,
  - 발생장소는 논밭(45%)이 가장 많고, 집과 비닐하우스도 각각 10.6%를 차지

\*

\*폭염은 최고기온이 33°C 이상, 열대야는 밤 기온이 25°C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